

4.13 총선 결과분석 및 정국전망

장 수찬 (목원대학교)

■ 글의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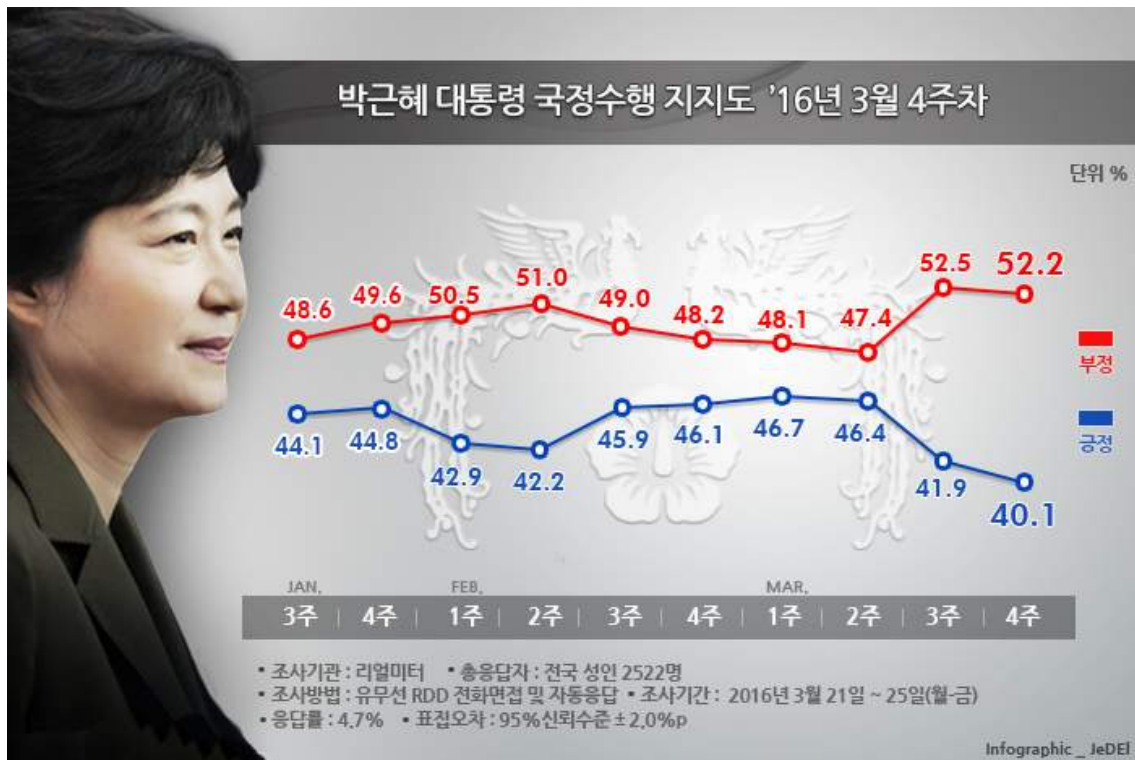
- I. 4.13 총선의 주요 특징: 분노투표
- II. 전국 4.13 총선결과 및 해석
- III. 대전·충남 4.13 총선결과 및 해석
- IV. 총선 후 정국전망 (정당별)
- V. 정치상황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I. 4.13 총선의 주요 특징은? : 분노 투표

1.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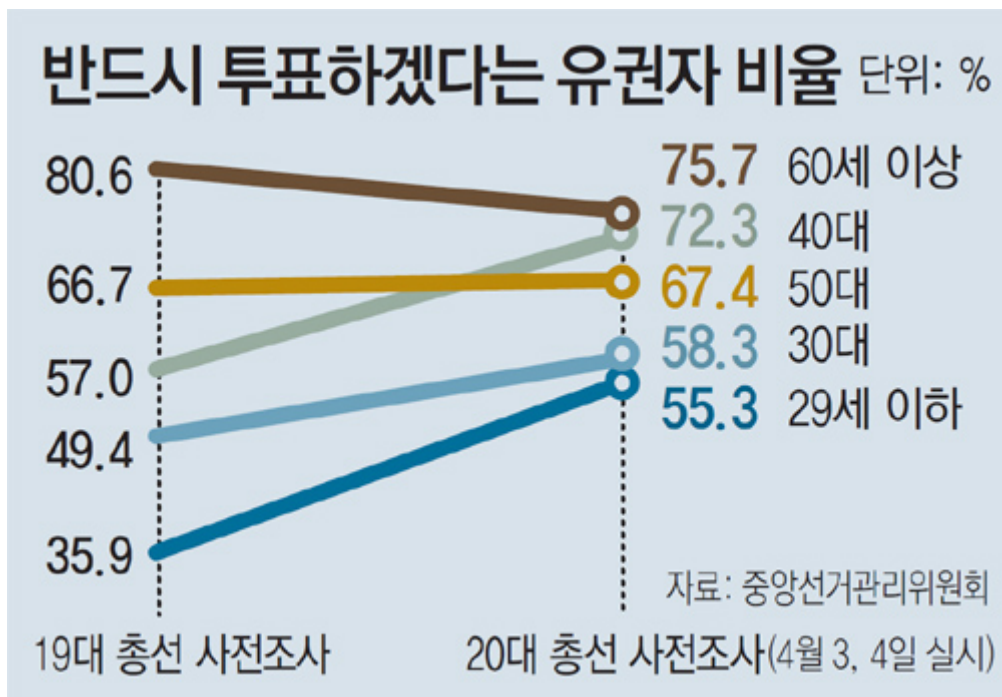
총선의 중간 평가적 기능작동 (回顧主義的 투표)
회고 주의 적

- 회고투표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선거로 처벌
- 박근혜정부 집권 39개월 후에 치러지는 총선임에도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졌다.
- 집권정부가 30개월을 넘긴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회고주의적 투표성격이 강했다.
- 리얼미터 혹은 갤럽조사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지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왔다.
- 정권심판론은 야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쉬운쟁점 → 쉬운 쟁점이 부각되기 어려운 구조(야권분열, 박근혜 국정지지도 등) → 쟁점 없는 선거로 전환



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인식되었다.

- 그러나 수면아래에서,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파동-유시민파동-공천파동을 겪으면서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문제퇴행에 대한 분노는 축적되어 가고 있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3일~4일에 조사를 실시하여, 4월 1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선직전에 20-30대의 투표참여를 통한 **분노투표** **예견가능**

총선 투표의향

	사례수	강화구		양화구		양화향		강화향		두포동		의향동		잠모름		계	
		조사완료	목표합당	%	%	%	%	%	%	%	%	%	%	%	%	%	%
전체	(2011)	(2000)	8.8	3.3	18.7	68.6	12.0	87.3	.7	100.0							
지수	(461)	(401)	14.5	1.7	16.5	66.1	16.2	82.5	1.3	100.0							
전/경/생	(416)	(388)	4.2	3.0	23.3	75.9	7.2	86.0	.9	100.0							
산/경/생	(169)	(169)	11.8	7.8	20.0	56.8	19.5	75.8	3.6	100.0							
주/경/생	(113)	(60)	9.0	4.1	21.4	66.0	13.1	86.4	.5	100.0							
주/경/생	(342)	(314)	18.8	5.9	20.3	56.3	24.4	85.6	.0	100.0							
주/경/생	(253)	(203)	2.6	3.3	17.6	78.3	5.4	93.6	1.0	100.0							
주/경/생	(224)	(203)	.0	.0	28.0	68.7	3.3	96.7	.0	100.0							
지수	(877)	(990)	8.3	2.5	16.9	71.6	10.8	88.5	.7	100.0							
심여	(1363)	(992)	7.4	3.5	17.6	70.5	10.9	88.1	.9	100.0							
심여	(648)	(1008)	10.1	3.0	19.8	66.6	13.1	86.4	.5	100.0							
지수	(169)	(352)	4.5	2.0	19.8	73.7	6.5	93.5	.0	100.0							
지수	(222)	(366)	12.5	2.1	15.2	68.6	14.6	83.8	1.6	100.0							
지수	(333)	(422)	9.0	4.0	17.6	70.6	13.1	85.2	1.7	100.0							
지수	(746)	(969)	11.0	4.8	22.0	69.2	10.0	93.6	.1	100.0							
지수	(807)	(674)	11.5	3.0	23.2	61.9	14.4	85.1	.5	100.0							
지수	(450)	(450)	9.1	4.8	17.2	78.9	10.8	86.4	.0	100.0							
지수	(27)	(169)	16.6	2.7	6.5	76.2	17.3	82.7	.0	100.0							
지수	(59)	(73)	13.9	2.7	27.0	55.5	16.6	82.5	.0	100.0							
지수	(102)	(104)	13.1	9.5	32.5	41.1	22.7	73.6	3.8	100.0							
지수	(681)	(577)	15.2	3.2	16.8	64.2	18.3	81.0	.7	100.0							
지수	(685)	(717)	3.5	3.5	20.2	78.2	9.5	89.6	.6	100.0							
지수	(254)	(257)	11.9	2.8	25.1	58.0	14.7	84.1	1.2	100.0							
지수	(479)	(801)	9.9	2.1	11.1	75.8	12.0	87.0	1.0	100.0							
지수	(196)	(155)	10.7	7.1	26.3	58.9	13.5	85.0	1.5	100.0							
지수	(315)	(380)	10.2	4.0	23.8	61.6	14.3	85.0	.2	100.0							
지수	(530)	(415)	7.9	2.8	19.8	69.5	10.7	89.3	.0	100.0							
지수	(90)	(137)	4.8	1.4	19.4	74.1	12.2	89.3	.0	100.0							
지수	(154)	(151)	11.4	1.5	22.4	62.9	11.0	89.4	.2	100.0							
지수	(154)	(109)	9.0	5.3	24.4	62.7	14.3	85.1	.6	100.0							
지수	(933)	(780)	10.9	3.3	25.4	59.6	14.2	85.1	.8	100.0							
지수	(956)	(1070)	4.9	3.1	12.7	78.7	8.0	91.4	.6	100.0							
지수	(122)	(150)	25.4	3.9	27.1	42.6	29.3	69.7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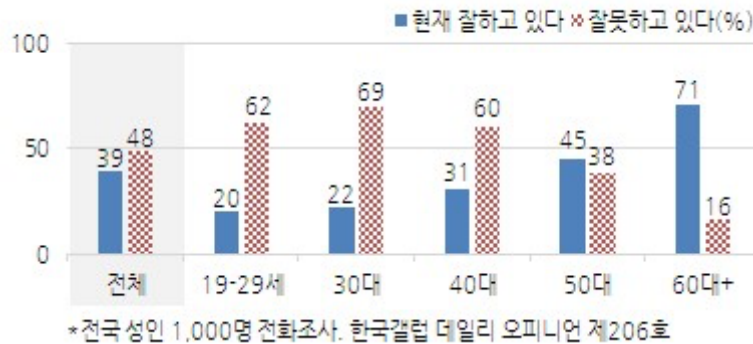
국정수행지지도

	사례수		①잘하는 편	②매우 잘함	③잘못하긴 하지만	④매우 잘못	국정수행지지도 (①+②)	국정수행지지도 (③+④)	무응답	
	조사완료	목표할당	%	%	%	%	%	%	%	%
■ 전 체 ■	(2011)	(2000)	24.9	14.1	19.3	34.2	39.0	53.5	7.5	100.0
■ 지식경제부 ■	(461)	(401)	19.2	12.3	16.1	40.6	31.5	56.7	11.8	100.0
■ 지식경제부/인프라정책실	(416)	(589)	24.9	13.1	18.4	38.2	38.1	56.6	5.3	100.0
■ 지식경제부/기술정책실	(169)	(206)	13.6	10.4	19.5	56.5	47.2	48.8	4.0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	(113)	(60)	33.2	24.7	11.3	29.7	44.9	48.0	7.2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	(342)	(314)	28.4	15.7	18.5	30.1	44.2	48.6	9.3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	(253)	(204)	28.8	22.3	16.4	23.1	51.1	39.6	9.3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224)	(224)	13.3	10.0	34.1	33.9	23.3	67.9	8.8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33)	(24)	16.4	18.3	21.9	38.5	34.7	61.4	5.6	100.0
■ 지주도 ■	(877)	(990)	22.6	12.8	17.5	39.2	35.4	56.6	8.0	100.0
■ 수도권 ■	(1363)	(982)	24.0	13.9	20.5	37.4	37.9	57.9	4.2	100.0
■ 수도권/서울	(648)	(1008)	25.8	14.3	18.0	37.1	40.1	49.1	10.8	100.0
■ 수도권/경기	(169)	(352)	13.6	8.7	20.7	52.6	22.3	73.3	4.4	100.0
■ 수도권/경기/수도권	(222)	(365)	13.8	6.1	15.9	52.4	19.9	68.2	11.8	100.0
■ 수도권/경기/수도권/수도권	(333)	(422)	18.1	12.1	22.1	40.3	34.3	53.0	8.9	100.0
■ 수도권/경기/수도권/수도권/수도권	(548)	(355)	28.9	17.3	26.4	28.6	47.3	26.2	6.0	100.0
■ 수도권/경기/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741)	(461)	44.2	23.6	17.4	8.8	67.8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807)	(674)	53.1	31.6	8.9	2.9	84.7	11.8	3.6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450)	(556)	4.2	3.5	27.4	66.8	7.7	88.1	3.4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466)	(424)	16.1	7.8	38.5	23.9	3.9	66.3	18.9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127)	(169)	1.5	2.4	17.0	70.3	3.9	77.3	18.7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169)	(173)	32.5	6.7	11.6	40.7	38.9	32.4	2.7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102)	(164)	21.7	7.8	22.5	28.8	28.5	48.3	23.2	100.0
■ 이념상향 ■	(681)	(577)	40.9	24.7	14.6	12.3	65.6	26.9	7.5	100.0
■ 이념상향/수도권	(885)	(712)	21.4	10.2	23.0	38.9	31.6	62.0	6.4	100.0
■ 이념상향/수도권/수도권	(391)	(454)	7.0	6.4	19.9	61.6	13.3	81.5	5.2	100.0
■ 이념상향/수도권/수도권/수도권	(254)	(257)	30.5	14.8	18.3	22.0	45.3	40.2	14.5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479)	(601)	16.4	8.0	16.3	51.7	24.3	68.0	7.7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196)	(355)	21.9	11.1	33.3	28.2	33.0	61.5	5.5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315)	(380)	25.7	19.3	19.1	14.2	50.0	33.7	11.3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90)	(137)	13.0	6.7	16.5	25.5	19.7	44.6	7.2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90)	(51)	36.7	17.1	19.6	16.5	53.9	42.8	5.3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137)	(193)	25.2	13.1	19.6	23.3	37.3	52.7	8.4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124)	(153)	25.8	13.5	19.6	23.7	39.3	56.6	8.4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188)	(175)	31.5	16.9	14.4	15.5	48.4	29.9	21.7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74)	(65)	16.8	22.9	24.2	22.5	38.7	51.3	9.0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주요사업	(402)	(375)	39.8	13.2	20.3	15.9	53.0	36.2	10.8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	(1332)	(1371)	20.4	13.5	19.1	42.3	33.9	61.4	4.7	100.0
■ 지식경제부/신산업정책실/주요사업	(15)	(14)	22.5	19.5	23.9	23.7	42.0	47.6	10.4	100.0

-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지지도 조사에서(리얼미터 4월 12일자 조사), 서울지역 유권자 중에서 ‘매우 잘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0.6%, 경기·인천지역 유권자 중에서는 38.6% 였다.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답한 사람을 포함하면, 서울지역의

유권자 중에서 56.7%가, 경기·인천지역 유권자 중에서는 56.6%를 차지하고 있었다.
 - 주목해야 될 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매우 잘못한다’ 답변한 사람들이 절대다수 였다는 사실이다

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연령별 - 2016년 4월 2주(11~12일)



(분노투표) 특히 20-30대의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68~7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한다’고 평가한 20대는 52.6%, 30대에서는 52.4%였다. 계층적으로 보면, 학생층과 전문직층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52% 정도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매우 잘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분노의 이유) : ① 경제정책·복지서민정책(33%) ② 비민주주의·불소통·독선적 국정운영·공약파기(34%) - 갤럽조사결과 (4월11일)

2. 기성정당정치에 대한 분노

※ 첫 번째 분노는 두 번째 분노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분노는 세 번째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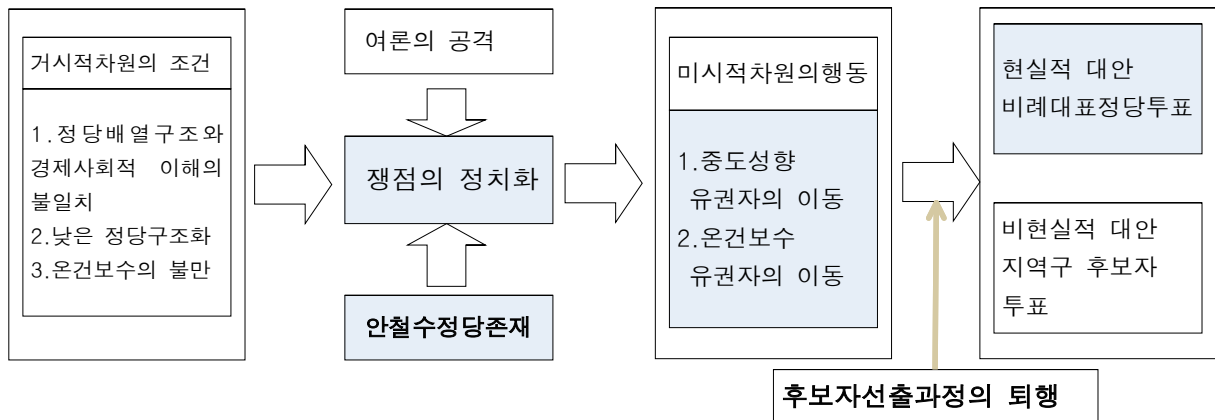
(1) 거시적 차원의 조건

- ① 정당배열구조(지역주의 배열구조)와 경제적 사회 균열의 불일치가 정당에 대한 불만을 극대화하는 원인
- ② 낮은 정당구조화 수준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불가능
 - 정당과 시민사회는 별개로, 정당은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통제
 - 정당의 공직자 선출과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
 - 주요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과정의 극단적 파행(영업사장의 자가추천, 유의원파동, 옥쇄파동 등등)

- ③ 수구세력에 의한 보수진영 내의 장기적 헤게모니 장악 → 새누리당 내의 온건 보수 세력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확대·축척

(2) 정당정치불만의 정치쟁점화

- ① 양당체제 불만의 정치쟁점화 (정치의 양극화, 정치의 기득권화)
- ② 안철수와 국민의 당의 존재(대안의 존재)
- ③ 여론의 기존정당에 대한 공격 및 정치 동원화



(3) 미시적 차원의 행동

- ① 야당 중도성향 유권자의 부분적 이동(기존 양당체제에 대한 실망감)
- ② 온건보수 유권자의 이동(수구보수에 대한 실망감)
- ③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 투표의 결합(비례대표 투표)

(4) 후보자 선출과정의 퇴행적 피아스코(fiasco)

- ① 야당 중도성향 유권자의 실망-영업사장의 셀프공천
- ② 유승민 배제전략과 공천위의 희화화
- ③ 옥쇄투쟁과 정치적 뒷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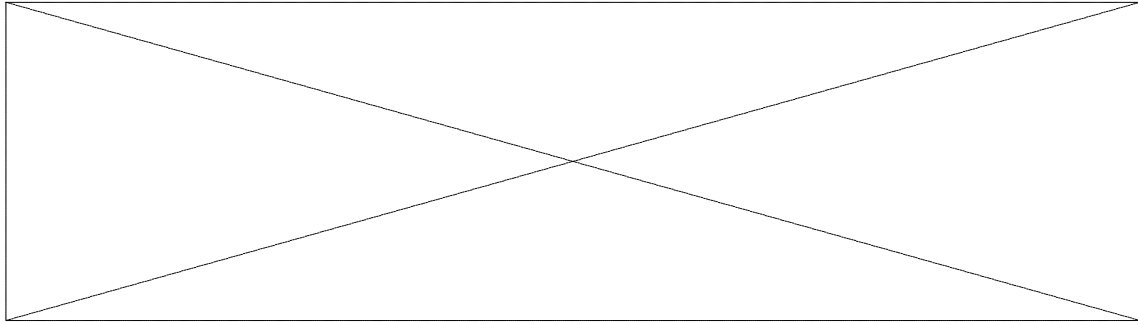
(5) 유권자의 선택: 현실적 대안으로서 비례대표 정당투표 (국민의당)

- ① 지역구 국민의당 후보자 pool의 빈약 - 경쟁력 약화
- ② 차선을 찾아서 투표하기-더불어 민주당
- ③ 분노의 현실적 대안 찾기- 국민의당 → 분노의 반사적 이익의 극대화

3. 호남의 분노: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 두 번째 분노(기성정당정치)는 세 번째 분노(호남의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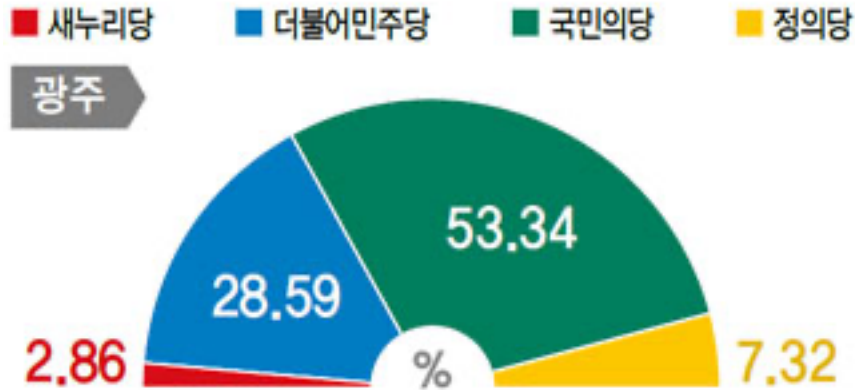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정당의 출현경로



(1) 호남의 분노(반사적 정치주의)는 기존의 '저항적 지역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 ① 거시적 차원의 '지역 간 차별정책'과 같은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
- ② 호남의 분노는 '야권 정치해게모니 쟁탈전의 소외감'에 근거하고 있다.
- ③ 호남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이해보다는 친노 반패권주의 전략을 통하여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엘리트들의 정치 동원화 전략에 대한 호남인들의 반사적 반응이다.
- ④ 친노 세력의 호남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점이 존재 한다면 → 정치적 협상과 거래를 통하여 충분히 수정 가능한 과제 → 문제인이 해게모니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위협하자 집단적으로 쫓기 → 친노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 ⑤ 저항적 지역주의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오던 광주가 반사적 지역주의에 선봉에 서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가?
 - 반사적 지역주의 바람이 거시적 차원의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친노 패권주의는 fact 이거나 정치적 skill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20대 총선 정당득표율



(2) 문재인인의 정치적 skill 및 판단의 문제: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개혁 드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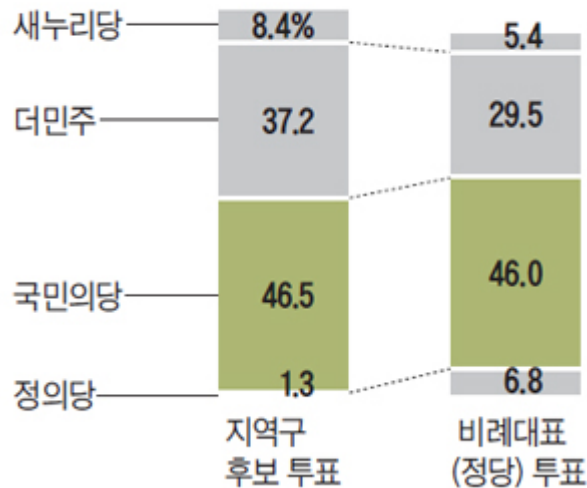
- ① 김상곤 혁신위-탈당과 분열의 핵심은 현역의원 20% 컷오프 가이드라인
 - 지역구 21명과 비례대표 5명 등 26명이 컷오프대상-80여명의 의원들이 좌불안석
 - 호남 국회의원 13명의 탈당
- ② 문재인인의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개혁 드라이브
- ③ 일부 호남세력의 친노프레임 활용전략+개혁 드라이브와 결합되면서 분열이 시작
- ④ 안철수의 친노 패권주의 프레임 활용전략+호남의 친노 프레임 활용전략
- ⑤ 천정배의 호남주도 야권정치재편 전략의 국민의당 결합
- ⑥ 박지원의 호남-친노 프레임의 적극적 동원화와 국민의당 결합
- ⑦ 정동영에 대한 동교동계의 설득과 정동영의 국민의당 참여
- ⑧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인의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개혁 드라이브 → 호남주도의 야권재편을 열망하는 정치 엘리트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부여 → 엉뚱한 정치적 결과로 귀착
- ⑨ 호남인들의 강한 내부집단 선호도의 작동

(3) 호남의 소외의식과 정치적 반사주의

- ① 호남의 강한 소외의식의 존재
- ② 강한 내부집단 선호도의 존재
- ③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엘리트의 결합 (안철수의 친노 패권주의 반대전략과 결합)
- ④ 반사적 지역주의 정치가 호남지역주의에 대한 해계모니를 장악 → 건강한 호남 지역주의의 심각한 마모가 우려된다.
- ⑤ 정치엘리트들로 대표되지 않는 저항적 지역주의는 정치 동원화되지 못한다

⑥ 4년 동안 46%가 승자독식제도 때문에 호남정치를 대표하게 된다.

20대 총선 호남(광주·전남북) 정당별 득표율



(4)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는 정치적 리더십을 잃었다

- ① 36~38%를 차지하는 개혁적 호남지역주의는 리더십을 잃었다.
- ② 정치적 리더십과 결합되지 않은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의 누수현상이 과속화 될까 우려된다.

③ 36~38%를 차지하는 '저항적 호남지역주의(?)'의 내용은?

- ㉠ 20-30-40대가 저항적 지역주의의 핵심지지층
- ㉡ 계층적으로는 더민주주의의 전통적 지지층인 신중산층(???) : 광주에서 국민의당 지지가 높다는 사실은 계층적으로 단일한 집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 ㉢ 반사적 지역주의-농촌, 저항적 지역주의-도시와 같은 패턴이 발견되지 않음.
- ㉣ 전국단위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더민주지지층인 20-30-40대, 도시지역, 신중산층의 overlap이 발견되지 않는다.
- ④ 시민사회가 저항적 지역주의를 위한 정치적 대체제(정치적 리더십)를 가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 ⑤ 시민사회는 반사적 지역주의와 저항적 지역주의 사이에 분열 혹은 갈등

(5) 호남에서 반사적 지역주의와 저항적 지역주의와의 대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은?

- ① 반사적 지역주의와 저항적 지역주의는 세대결(20-30-40대 vs 50-60대 이상)에 기초하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잘 해소되기 어려운 내부집단 응집력을 갖는다.

- ② 이번 선거에서 중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40대는 50-60대에 의해 정치적으로 설득 당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지역주의 대결이 펼쳐졌다.
- ③ 저항적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더민주당과 반사적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의당의 존재가 호남 내의 세대결의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

II. 전국 4.13 총선결과 및 해석

1. 투표율에 대한 이해

■ 역대 총선-대선-지방선거 투표율

2004	2006	2007	2008	2010	2012	2014	2016
17대 총선	5.13 지방선거	대선	18대 총선	6.2 지방선거	19대 총선	6.4 지방선거	20대 총선
60.6%	51.3%	63%	46.1%	54.5%	54.3%	56.8%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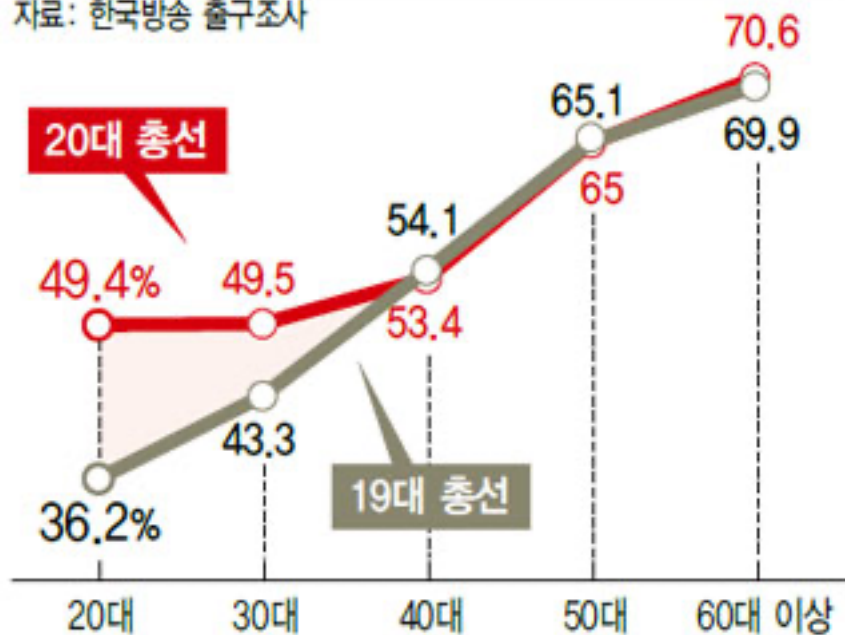
■ 역대 선거에서의 세대별 투표율 차이

	총선 (16)	총선 (12)	지선 (10)	총선 (08)	대 선 (07)	지 선 (06)	대 선 (02)	지 선 (02)	총 선 (00)	대 선 (97)	총 선 (96)
20대	49.4	45.0	41.9	28.1	46.6	34.0	56.5	31.2	36.8	68.2	68.2
30대	49.5	41.8	45.0	35.5	55.1	41.4	67.4	39.3	50.6	82.8	82.8
40대	53.4	54.1		47.9	66.3	55.4	76.3	56.2	66.8	87.5	87.5
50대	65.0	65.1	55.0	60.3	76.6	68.2	83.7	70	77.6	89.9	89.9
60대 이상	70.6	69.9		65.5	76.3	70.0	78.7	72.5	75.2	81.9	81.9
전체	58.0	54.2	54.5	46.1	63.0	51.6	70.8	48.9	57.2	80.7	80.7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및 방송3사 출구조사 (2010년, 2012년)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③ 세대별 투표와 야권의 승패

- 20대 총선에서,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20대는 약 13%, 30대는 약 6% 증가했으나, 50-6-대에서는 별다른 투표율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 이미 19대 총선에서 20-30대 투표율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단히 높았는데, 또다시 이들이 전국 투표율 증가를 리더했을 가능성이 높다.
- 서울-경기 지역의 **20-30대가 야권성향의 분노투표**에 가담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 20대 지역별 투표율 결과 (보완필요-20대 총선 투표결과)

- 19대 총선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20대 투표율은 64.1%로 전국 20대 투표율 평균 45%를 크게 웃돌았다.
- 19대 총선에서 연령별 전국 투표율은 20대 45%, 30대 41.8%, 40대 50.3%, 50대 64.6%, 60대 이상 69.7%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크게 올랐다.
- 18대 총선에서 20대 28.1%, 30대 35.5%, 40대 47.9%, 50대 60.3%, 60대 이상 65.5%. 전체 투표율은 46.1%였으며 민주당은 대패했다.
- 2010년 6.2 지방선거 (전체 54.5%)에서 20대 41.9%, 30대가 45.0%, 50대가 55% 투표하여 민주당은 승리하였다.
- 예상투표율의 저조 → 야권패배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
	계	계	선거일투표	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접수수)	
합계	42,100,398	24,430,746	19,143,066	5,287,680	58.0%
서울특별시	8,423,654	5,034,474	4,022,461	1,012,013	59.8% ↑
부산광역시	2,952,961	1,636,061	1,335,378	300,683	55.4%
대구광역시	2,031,478	1,113,056	901,415	211,641	54.8%
인천광역시	2,379,666	1,323,196	1,058,625	264,571	55.6%
광주광역시	1,158,598	713,886	528,371	185,515	61.6% ↑
대전광역시	1,214,402	712,143	551,396	160,747	58.6% ↑
울산광역시	937,421	554,631	439,778	114,853	59.2% ↑
세종특별자치	167,798	106,587	77,630	28,957	63.5% ↑
경기도	10,034,919	5,768,325	4,614,761	1,153,564	57.5%
강원도	1,277,858	736,891	559,190	177,701	57.7%
충청북도	1,287,549	737,249	567,102	170,147	57.3%
충청남도	1,683,854	934,429	725,447	208,982	55.5%
전라북도	1,520,032	956,033	687,071	268,962	62.9% ↑
전라남도	1,567,192	997,524	694,325	303,199	63.7% ↑
경상북도	2,242,016	1,270,113	945,511	324,602	56.7%
경상남도	2,719,668	1,549,255	1,204,166	345,089	57.0%
제주특별자치	501,332	286,893	230,439	56,454	57.2%

2. 20대 총선 결과 요약

(1) 새누리당의 참패, 더불어 민주당의 약진, 국민의 당의 대승

(2) 민주개혁세력의 지속적인 동진(강원-충북-경북-대구-울산-경남-부산벨트) 확장성 확인 → 기타 지역에서 민주개혁세력의 지속적인 성장확인

- ① 동부벨트에서 더민주당 후보자의 득표력이 지속적으로 제고-승자의 확대
- ② 대전·충남지역에서 더민주당 후보자의 전반적인 득표력의 확대-승자 확대

(3) 지역정당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서 계층·계급 투표의 진화

- ① 서울·경기·인천·대전·천안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계층 투표의 진화
- ② 신중산층 밀집지역에서 더민주 후보의 선전

(4) 지역주의의 완화, 세대대결의 부상, 계층투표의 약진

(5) 더민주당은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으로 변모했는가?

- ① 외견상 더민주 호남지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으로 변모
 - ② 서울·경기지역에서 더민주의 압도적 승리는 호남의 전략적 투표에 빚지고 있는가?
- 호남유권자들이 완전히 지역주의 투표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관악구갑(김성식), 중구성동구을(정준호)에서 더민주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다.
- ③ 호남을 근거지로 하지 않은 더민주당의 정치적 진로는 가능한가?

- ④ 호남을 근거지로 하지 않은 더민주당의 확장성은 영남지역에서 더 높아지는가?
- ⑤ 더민주당의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는 정당배열구조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가?
- ⑥ 호남의 반사적 지역주의(저항적 지역주의 지원 확보를 전제)의 지원 없이 야권의 정권재창출은 전적으로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는 가능하나, 호남 유권자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장해주는 연결고리가 대단히 허약하다. 호남-개혁세력 정치연합과 같은 단순 명료한 정치연대의 해체는 위험하다.

■ 20대 총선 전국 선거결과 요약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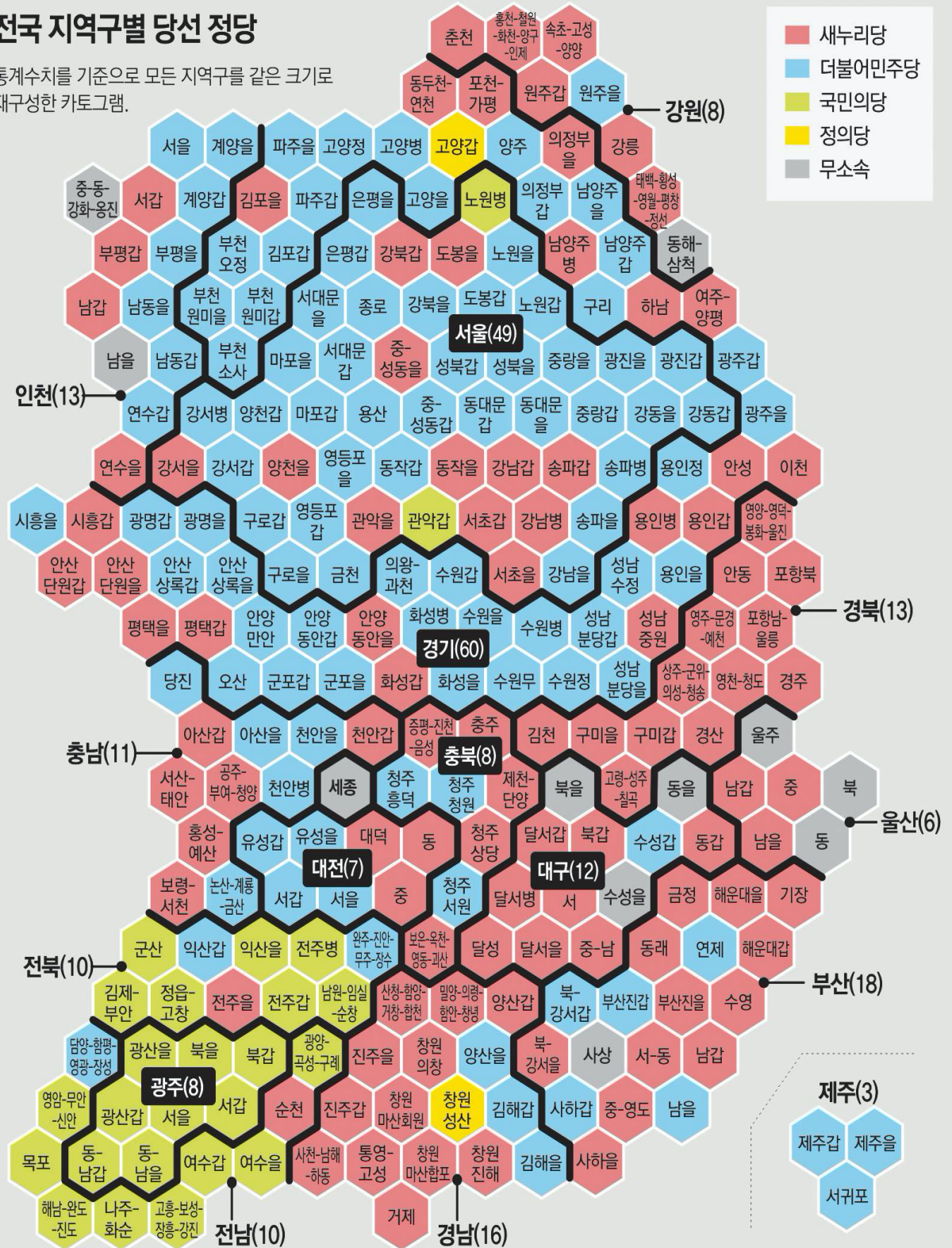
구분		새누리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	253	105(17)	110(13)	25(13)	2(4)	11
서울	49	12	35	2		
부산	18	12	5			1
대구	12	8	1			3
인천	13	4	7			2
광주	8			8		
대전	7	3	4			
울산	6	3				3
경기	60	19	40		1	
강원	8	6	1			1
충북	8	5	3			
충남	11	6	5			
전북	10	1	2	7		
전남	10	1	1	8		
경북	13	13				
경남	16	12	3		1	
제주	3		3			
세종	1					1

■ 19대 총선 전국 정당별 선거결과 요약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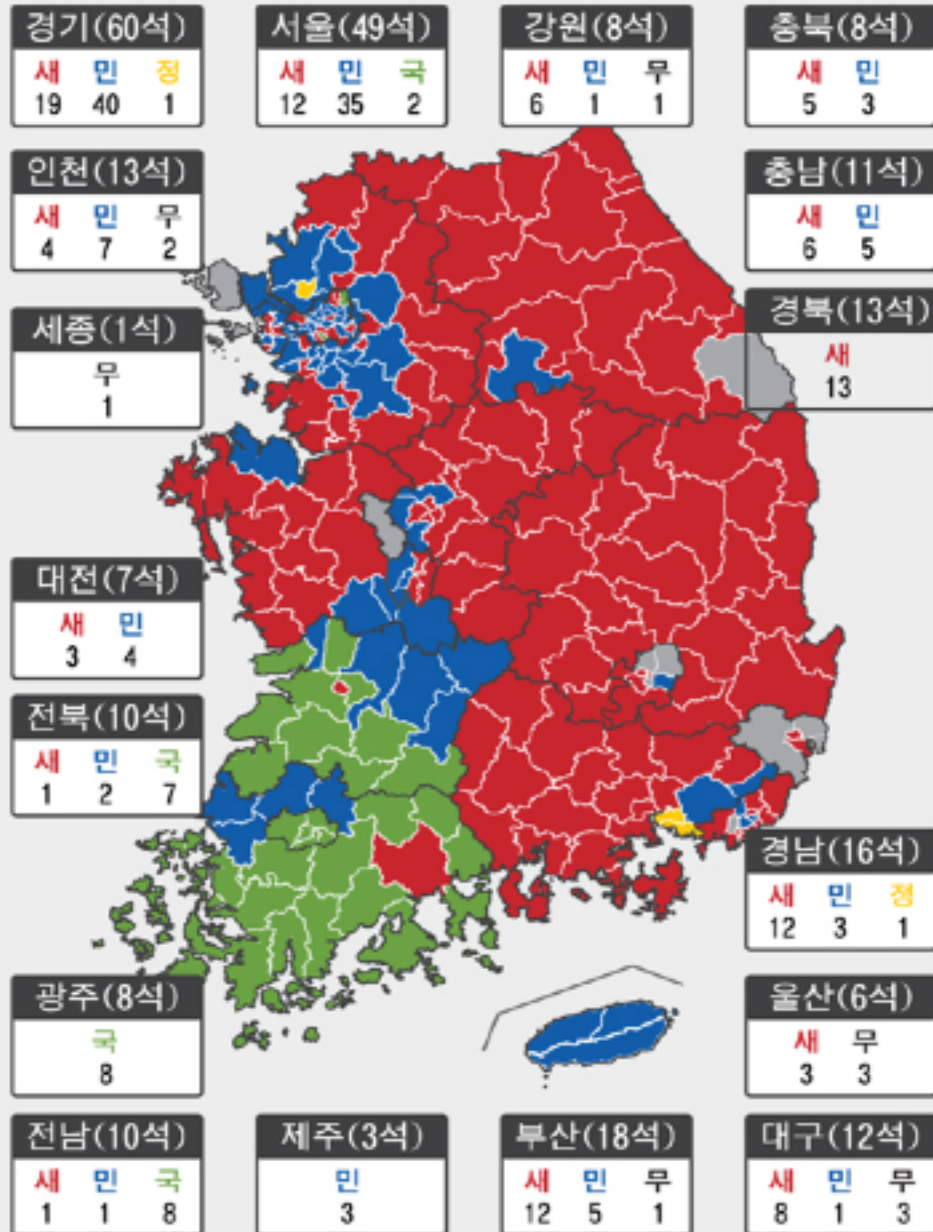
구분		새누리	민주통합	자유선진	통합진보	무소속
합계	246	128	106	3	6	3
서울	48	16	30	0	2	0
부산	18	16	2	0	0	0
대구	12	12	0	0	0	0
인천	12	6	6	0	0	0
광주	8	0	6	0	1	1
대전	6	3	3	0	0	0
울산	6	6	0	0	0	0
경기	52	22	29	0	0	0
강원	9	9	0	0	0	0
충북	8	5	3	0	0	0
충남	10	4	3	3	0	0
전북	11	0	9	0	1	1
전남	11	0	10	0	1	0
경북	15	15	0	0	0	0
경남	16	14	1	0	0	1
제주	1	0	3	0	0	0
세종	1	0	1	0	0	0

전국 지역구별 당선 정당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지역구를 같은 크기로 재구성한 카토그램.



지역구 당선자 현황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무소속



Ⅲ. 대전·충남지역의 총선결과 및 해석

1. 대전지역 선거결과 요약

(1) 새누리당의 완패, 야권의 압승 → 대전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 확인

- ① 승자독식제도에 가려진 새누리당의 완패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여권 30.96 vs 야권 62.90%

19대 총선에서 여권 52.21 vs 야권 41.2%

- ② 새누리당 온건보수세력의 이탈 확인: 온건보수의 이탈 없이 국민의당의 비례 득표율 달성은 기본적으로 불가능
 -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국민의당이 정당별 득표율에서 더민주당에 앞서
- ③ 야당이 새누리당의 온건보수세력을 견인할 인물군의 부족으로,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승리하지 못함(후보자 pool의 부족)
- ④ 후보자 pool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2) 계층 투표(세대투표)의 확대

- ① 신중산층 밀집지역일수록 더민주당이 압승
 - 유성(이상민)-서구(박범계)-유성갑(조승래)-박병석(서구갑)
- ② 신중산층 밀집지역인 유성-서구에서 정당비례득표율에서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비해 앞섰다
- ③ 2012년(대전), 2014년(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던 세대투표의 진화가 확대
- ④ 신중산층 밀집지역(서구와 유성구)에서 정의당의 비례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체 평균 7.57 (동구,중구,대덕구 평균 5.75%)
- ⑤ 신중산층 밀집지역인 유성에서 정의당의 비례득표율이 10.80%, 서구 7.88%

(3) 지역해계모니 정당 없는 충청도에서 서울·경기지역과 유사한 투표양식 확인

(4) 서울·경기지역에서 관찰되는 교차투표가 대전지역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

- ① 정당별 득표율: 새누리(30.96%), 더민주당(28.19), 국민의당(27.14)
- ② 신중산층 밀집지역인 유성-서구에서 정당비례득표율에서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비해 앞섰다

(5) 정의당 비례 정당 득표율(7.57%)이 전국 평균을 7.32%를 확실히 상회

- ① 대전지역 정의당 비례 정당 득표율이 서울(8.50%)에 미치지 못하나, 경기(7.78%) 혹은 인천(7.49%)와 유사하게 나타남.
- ② 광주(7.32), 부산(6.02), 대구(6.07)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편임

■ 대전지역 20대 총선 선거결과 (2016년)

선거구명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동구	이장우(44.05)	강래구(37.36)	선병렬(17.10)	
중구	이은권(41.64)	송행수(33.87)	유배근(22.05)	
서구갑	이영규(39.83)	박병석(48.66)	김흥규(10.13)	주무늬
서구을	이재선(34.79)	박범계(49.53)	이동규(11.22)	김윤기
유성갑	진동규(33.72)	조승래(48.28)	고무열(14.49)	강영삼
유성을	김신호(26.17)	이상민(56.87)	김학일(11.18)	이성우
대덕구	정용기(45.46)	박영순(33.56)	김창수(18.88)	
비례득표율	30.96 (34.31-19대)	28.19(33.7-19대)	27.14	7.57%(정의당)

■ 대전지역 19대 총선 선거결과 (2012년)

선거구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비고
동구	이장우(34.97)	강래구(33.34)	임영호(29.30)	
중구	강창희(42.73)	이서령(26.72)	권선택(29.16)	
서구갑	이영규(33.96)	박병석(54.53)	송종환(9.10)	
서구을	최연혜(23.26)	박범계(43.62)	이재선(30.67)	
유성구	진동규(30.72)	이상민(52.54)	송석찬(15.91)	
대덕구	박성호(50.19)	김창근(30.99)*	이현(18.80)	*진보통합
비례득표율	34.31 (24.78-18대)	33.7(18.61-18대)	17.90 (34.34-18대)	

■ 대전지역 18대 총선 선거결과(2008년)

선거구명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비고
동구	윤석만(21.51)	선병렬(24.99)-현역	임영호(49.79)*	
중구	강창희(39.50)	유배근(11.46)	권선택(47.87)*-현역	
서구갑	한기온(20.74)	박병석(41.29)*-현역	백운교(22.87)	
서구을	나경수(22.99)	박범계(26.41)	이재선(41.37)*-현역	
유성구	송병대(22.41)	정병옥(12.76)	이상민(41.30)*-현역	
대덕구	이창섭(31.11)	김원웅(30.05)-현역	김창수(33.93)*	
비례득표율	24.78	18.61	34.34	

■ 대전지역 5회 지방선거 결과 (2010년)

선거구명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비고
시장선거	박성호(28.5)	김원웅(23.3)	염홍철(46.7)*	
동구	이장우(31.9)	양승근(30.3)	한현택(35.7)*	
중구	이은권(33.0)	남일(26.2)	박용갑(39.5)*	
서구	조신형(24.6)	장종태(34.5)	박환용(38.3)*	
유성구	진동규(31.7)	허태정(41.9)*	송재용(26.5)	
대덕구	정용기(33.8)*	박영순(29.5)	최충규(31.9)	
비례득표율	24.8	29.8	40.0	민주노동2.6

3. 충남지역 총선결과 요약

(1) 새누리당의 패배, 더민주의 선전 → 야권의 약진이 지속적으로 확대

- ① 승자독식제도에 가려진 새누리당의 패배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여권 36.92 vs 야권 49.56%

19대 총선에서 여권 56.96 vs 야권 30.40%

- ② 야권이 충남을 반분하다 (의석수 6 vs 6, 세종시 포함시)
- ③ 도시지역에서 야권이 압도적 승리-충남의 도시화 확대로 인해 승리의 확대
- ④ 18대 선거에서 야권은 정당득표율에서 13.54%를 획득 → 야권이 49.56%로 확장 → 새누리당 온건보수 지지자들의 이탈 확인

(2) 북부벨트(천안-아산-당진)를 중심으로 계층 투표(세대투표)의 확대

- ① 신중산층 밀집지역에서 더민주당이 승리
천안을(박완주)-천안병(양승조)-아산을(강훈식)-어기구(당진)
- ② 2012년(대선), 2014년(지방선거), 2016년(국회의원) 선거에서 북부벨트를 중심으로 한 야권투표의 확대
- ③ 농촌지역에서도 야권 후보자의 경쟁력이 확보- 후보자 pool의 변화와 차기 총선에서 야권 의석수의 확대 예견
- ④
- ⑤

(3) 전통적 여촌야도(與村野都)현상

- ① 새누리당 당선자 6명 중 5명이 농촌지역에서 당선
- ② 김종민(논산·계룡·금산)이 안희정 마케팅을 통해 농촌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
- ③ 김종민이 계룡, 금산 지역에서는 상대 후보인 이인제에게 패배
- ④ 박수현 후보자가 공주에서 압승했으나 농촌지역인 청양, 부여에서 정진석 후보자에게 크게 뒤짐으로서 패배
- ⑤ 청양(49)-예산(48)-태안(46)-보령(45)-부여(44)-홍성(42)-금산(41) 순으로 새누리당 정당비례득표율이 높음(괄호안은 득표율)

(4) 서울·경기지역에서 관찰되는 교차투표가 충남지역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

- ① 정당별 득표율: 새누리(36.92%), 더민주당(27.05), 국민의당(22.51)
- ② 교차투표 와중에서도 신중산층 밀집지역이 더민주당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여줌- 예를 들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유일하게 더민주당의 정당득표율(32.36%)이 새누리당(27.57%)을 앞섰다.

(5) 정의당 비례 정당 득표율(5.60%)이 전국 평균을 7.32%를 확실히 밑돌다

- ① 정의당 정당득표율이 전국 평균(7.32)을 넘은 유일한 지역은 천안 서북구(7.98%) 뿐이다.

② 농촌지역(청양-예산-태안-보령-부여-홍성-금산)일수록 정의당의 비례득표율은 낮아진다.

■ 충남지역 20대 총선 선거결과 (2016년)

선거구명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비고
천안갑	박찬우(45.46)	한태선(34.62)	이종설(17.41)	이명성
천안을	최민기(29.03)	박완주(52.70)	정재택(14.74)	
천안병	이창수(30.18)	양승조(49.67)	정순평(20.13)	
공주부여청양	정진석(48.12)	박수현(44.95)	전홍기(6.91)	
보령서천	김태흠(50.70)	나소열(44.73)		이기원
아산갑	이명수(55.09)	이위종(44.90)		
아산을	이건영(33.84)	강훈식(47.61)	김광만(18.54)	
서산태안	성일종(39.05)	조한기(37.29)		한상율
논산계룡금산	이인제(42.55)	김종민(43.55)	이환식(13.89)	
홍성예산	홍문표(42.47)	강희권(24.09)	명원식(7.16)	
당진	김동완(38.76)	여기구(40.44)	송노섭(18.14)	
세종	박종준(36.04)	문홍수(10.59)	구성모(8.28)	이해찬(43.72)
정당비례득표율	36.92(36.57-19대)	27.05(30.40-19대)	22.51	

■ 충남지역 19대 총선 선거결과 (2012년)

선거구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비고
천안갑	전용학(40.02)	양승조(51.53)	강동복 (8.43)	
천안을	김호연(40.02)	박완주(41.91)	박상돈(18.06)	
공주시	박종준(43.68)	박수현(47.87)	윤완중(8.44)	
보령서천	김태흠(46.42)	엄승용(25.30)	류근찬(27.67)	
아산	이건영(23.15)	김선화(35.06)	이명수(40.88)	
서산태안	유상곤(29.12)	조한기(28.31)	성완종(42.55)	
논산계룡금산	이창원(17.78)	김종민(39.85)	이인제(42.36)	
부여청양	김근태(43.54)	박정현(20.38)	홍표근(24.96)	
홍성예산	홍문표(50.80)	서상목(29.63)	김영호(19.65)	
당진	김동완(44.20)	여기구(22.03)	김낙성(24.88)	
세종	이해찬	신진	심대평	
정당비례득표율	36.57(27.12-18대)	30.40(13.54-18대)	20.39(37.78-18대)	

** 통합진보 6.83(2012년)

■ 충남지역 18대 총선 선거결과(2008년)

선거구명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비고
천안갑	전용학(35.56)	양승조(38.26)	도병수 (24.17)	
천안을	김호연(35.79)	박완주(14.84)	박상돈(42.80)	
공주시	오병주(25.45)	김용명(5.42)	심대평(63.32)	
보령서천	김태흠(33.04)	조이환(12.72)	류근찬(52.14)	
아산	이훈규(31.36)	강훈식(13.75)	이명수(53.09)	
서산태안	김병목(16.78)	문석호(30.18)	변웅전(55.84)	
논산계룡금산	김영갑(20.80)	양승숙(17.56)	이인제(27.67)	
부여청양	김학원(38.08)	-	이진삼(55.37)	
홍성예산	홍문표(35.74)	-	이회창(60.90)	

당진	정덕구(33.24)	-	김낙성(58.26)	
정당비례득표율	27.12	13.54	37.78	

* 민주노동당 4.70, 진보신당 1.71%

IV. 총선이후의 정당별 정치전망

1. 새누리당과 대선 레이스

(1) 선거결과와 친박 순도의 확대

①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친박 순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3월 16일 26%에 불과했던 당내 친박계 의원 비율이 20대 총선 이후 50%로 오른 것이다.

② 레이더가 20대 총선 새누리당 당선자 122명(지역구 105명, 비례 17명)의 계파성향을 전수조사한 결과 친박 55명, 비(非)친박 54명, 기타 13명으로 나타났다. 친박계는 지난 조사(42명)보다 13명 증가했다(기타는 비례대표 등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해 계파를 나누기 어려운 인사들. 비율 계산에서는 제외함). 절대치로 보면 큰 증가세는 아니지만 비율은 크게 늘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의석수가 30석이나 줄어든 반면 친박계 숫자는 13명 늘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계파별 분류



친박 (46명)	현역(33명)	김기선, 김도읍, 김성찬,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박덕흠, 박대출, 박맹우, 박인숙, 배덕광, 서청원, 유기준, 유의동, 유재중, 윤영석, 이우현, 이완영, 이장우, 이정현, 이주영, 이학재, 이현승, 이채익, 원유철, 정갑윤, 정용기, 정우택, 조원진, 최경환, 함진규, 홍문종, 이철우
	비현역(13명)	강석진, 김선동, 곽대훈, 곽상도, 민경욱, 박성중, 박완수, 정종섭, 엄용수, 윤상직, 이양수, 정태옥, 추경호
비박 (25명)	현역(20명)	강석호, 김무성, 김상훈,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학용, 권성동, 신상진, 심재철, 여상규, 오신환, 이군현, 이진복, 정병국, 한선교,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비현역(5명)	박순자, 윤한홍, 이은재, 이해훈, 정양석
중립 (25명)	현역(16명)	경대수, 김광림, 김명연, 김정훈, 김재경, 김한표, 나경원, 박명재, 염동열, 윤재옥, 이명수, 이현재, 조경태, 하태경, 홍철호, 김성원
	비현역(9명)	김석기, 김정재, 성일중, 이은권, 이종구, 장석춘, 정운천, 정진석, 지상욱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일부 당선자 제외

그래픽: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③ 이에 따라 친박계의 입김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원내대표 선출, 당 대표 선출 등 2017년 대선 준비를 위해 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친박계의 의중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④ 새누리당 내에 온건 개혁세력의 목소리가 정당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어려움

구조를 탄생- 박근혜 정당의 강화 - 유연한 협치적 정국운영이 대단히 의문시!

⑤ 청와대 단 2줄의 총선논평- 주요 박근혜 경제 아젠다 계속 추진-유연한 협치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

(2) 총선패배의 원인 치료가 불가능

① 새누리당 총선패배의 원인은, 수구 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의 전일적 관철로 인한 온건 보수 혹은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의 이탈

② 친박 세력의 **정치운영 방식**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을 위배 → 20-30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치운영

③ 친박세력의 **경제운영방식**의 한계 - 대기업중심주의 · 통화주의정책 중심주의 → 유승민 등이 주장하는 공정한 시장주의와 재정 중심적 경제정책으로 전환 불가

- ④ 온건 보수세력의 정당 내 헤게모니 장악 가능성은 거의 없음 →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 당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3) 친박의 권력재창출 의지 대단히 확고 - 친박·비박 대결 불가피

- ① 잠재적 친박 대리인 오세훈, 김문수 등의 대권주자들의 패배
② 제3의 대리인 호출 - 반기문 등판 가능성이 높음
③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 등의 등장은 비박에게 정치적 헤게모니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카드
④ 일차적으로 비박 진영 내의 잠재적 주자 간의 경쟁 →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의 등판은 야권을 자극하여 안희정, 이재명 등의 차세대 등판 가능성을 부추 킬 가능성이 높음
⑤ 박근혜의 확고한 권력재창출 의지가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가장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

2. 더불어 민주당과 대선 레이스

(1) 선거결과와 개혁세력의 약진

① 20대 총선 결과, 범 개혁 그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개혁세력이 더민주 당의 최대 계파를 형성 - 더민주 내 '개혁 진보성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 개혁 성향 당선자들을 종합해보면 전체 당선자 123명 가운데 최소 7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범 개혁 세력 내에 친문세력의 약진 - 일단 수도권에 출마했던 김태년·전해철·윤호중·박남춘·홍영표 의원 등 기존 친문 성향 현역 의원들이 대거 당선. 조웅천·김병기·김병관·표창원 후보 등 영입 인사 당선. 최인호·전재수 당선자 등 부산·경남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한 당선자들도 친문 그룹으로 꼽힌다. 여기에 비례대표 당선자들도 합치면 친문 성향 당선자는 총 30명에 육박한다.

■ 당선자 계파분류

■ 친문직계(30)	강병원, 황희,박재호, 전재수,최인호,김해영,김경협,윤호중,윤후덕,김경수,박남춘,김태년,추미애,박주민,손혜원,금태섭,김병기,홍영표,김병관,전해철,조웅천,김정우,표창원,도종환,서형수,문미옥,이철희,제윤경,정춘숙,김성수
■ 민평련 & 386 (12)	박홍근,유승희,인재근,우원식,우상호,이인영,유동수,설훈,유은혜,박완주,이재정,김현권
■ 정세균계(13)	정세균,안규백,김영주,박병석,백혜련,김영진,김진표,김상희,백재현,김철민,이원욱,위성곤,박용진
■ 범친노그룹	홍익표,서영교,신경민,진선미,윤관석,박범계,문희상,원혜영,정재호,권칠승,

(18)	김현미, 한정애, 박광온
■ 안희정계	조승래, 김종민,
■ 시민파	이학영, 남인순, 기동민, 권미혁, 박홍근(민평련)
■ 손학규계(14)	양승조, 조정식, 이찬열, 김민기, 이개호, 전현희, 전해숙,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박찬대, 어기구, 임종성, 이춘석
■ 통합행동(7)	김영춘, 김부겸, 조정식, 박영선, 민병두, 송영길, 정성호
■ 기타비노(18)	김영호, 노웅래, 이훈, 이상민, 이종걸, 이언주, 김한정, 안민석, 김두관, 소병훈, 오제세, 변재일, 안호영, 강창일, 심재권, 이석현, 박정, 민홍철
■ 김종인 직계(4)	진영, 박경미, 김종인, 최운열
■ 기타(7)	최명길, 신동근, 신창현, 송기현, 오영훈, 송옥주, 이용득

③ 통합행동과 손학규계의 약진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당선자는 양승조·조정식·이찬열 당선자 등 15명에 이른다. 여기에 통합행동의 선전도 눈에 띈다. 지난해 더민주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행동은 조정식·박영선·민병두·정성호 의원과 김부겸·김영춘·정장선·송영길 전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전 의원을 제외하면 7명 전원이 당선됐다. 통합행동은 본질적으로 비노 성향이 강해 20대 국회에서 당내 비주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주요 계파		더불어민주당
주류	범친노	정세균, 김진표, 김태년, 홍영표, 김경협, 박남춘, 이학영, 전해철, 황희, 홍익표, 설훈, 강병원, 박범계, 도종환,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김경수, 민홍철
	문재인 영입	조웅천, 김병관, 김병기, 표창원, 박주민, 김정우
	안희정 측근	김종민, 조승래, 박완주
	86그룹	이인영, 이상호, 송영길, 이원욱
	박원순 측근	기동민, 권미혁
비주류	김종인 그룹	김종인, 진영, 박영선, 최명길, 박경미, 최운열
	손학규계	양승조, 조정식, 이춘석, 이찬열, 김민기, 이개호, 전현희, 전해숙,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박찬대, 어기구, 김영춘, 임종성
	비주류 중진	김부겸, 김두관, 이종걸, 민병두, 유승희

그래픽: 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2) 더민주당+국민의당 합당 가능성?

- ① 합당을 위한 전제: ㉠ 문재인인의 대권포기 선언, ㉡ 6월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의 당권장악 - ㉠ 은 불가능한 시나리오, ㉡ 은 합당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가능할 수도
- ② 합당을 위한 전제를 충족되지 않으면, 국민의당과 합당은 불가능
- ③ 합당 논의과정에서 더민주 비주류와 국민의당 호남파의 문재인 흔들기 예상
- ④ 합당논의가 정치적 쟁점화 할수록 제3의 대안에 대한 대중적 관심 고조
- ⑤ 합당논의에서 더민주 내부에서 개혁세력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
- ⑥ 더민주 비주류와 국민의당 호남파 사이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 높음

(3) 문재인과 대선 레이스

- ① 문재인인의 권력자원- ㉠ 당내 충성도 높은 지지세력(정당활동가) 구축 ㉡ 다수의 자파의원 확보 ㉢ 충성도 높은 핵심지지층 확보 ㉣ 장기간 대선지지율 1위 고수
- ② 부정적 요소 - 4.13 총선을 통한 호남의 확실한 비토 확인 -호남 개혁세력의 지지 (36~38%) 확보
- ③ 문재인인의 권력자원을 고려할 때, 문재인정파가 스스로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
- ④ 합당과정에서 더민주당 비주류+국민의당 호남파의 문재인 흔들기, 여론의 문재인 때리기(보수수구언론의 개혁세력 후려치기의 지속) 등 으로 문재인인의 대중적 지지도가 하락할 개연성은 충분
- ⑤ 합당논의의 정치적 쟁점화 → 문재인 대중적 지지도 급락 → 제3의 대안 모색 → 다양한 주자들의 등판 → 더민주와 국민의당 호남파의 합당 → 합당후 primary
- ⑥ 합당논의의 정치적 쟁점화 → 주류의 당권장악을 통한 문재인에 대한 정치공격 방어 → 지루한 합당논의의 무산 → 대권후보로서 문재인인의 상처확대 → 문재인 후보의 선거패배

(4) 합당 없는 더민주의 진로

- ① 세대투표와 계층 투표가 지역주의 투표를 어느 수준에서 대체하고 있는가? → 과학적 분석이 시급히 요구된다 → 더민주는 지역주의를 해체할 동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 ② 호남지역주의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 호남 보수적 지역주의의 해체모니 확대
 - 호남 저항적 지역주의의 리더십 상실 - 누가 저항적 지역주의의 정치적 매개 고리가 될 것인가?
 - 국민의당 내의 개혁적 리더십(천정배, 정동영 등)의 이탈과 호남 저항적 지역주의와의 결합 가능성은 없는가?

- 호남의 보수적 지역주의와 저항적 지역주의를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③ 호남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더민주의 영남 확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④ 더민주는 호남 유권자의 지지(호남의 전략적 지지-4.13 총선) 없이 수도권에서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 ⑤ 영남 확장성을 위해 국민의당과 합당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가?
-

3. 국민의 당과 안철수

(1) 선거결과 및 안철수의 해계모니 장악

- ① 더민주당으로부터 1차 탈당자들 (13명)은 안철수에게 정치적 빛이 크다.
- ② 안철수계(비례대표의원)의 약진
- ③ 국민의 당 선거승리 기여도를 통한 안철수의 당장악력은 높게 제고
- ④ 하지만 소속 의원들은 4년 동안 정치적 부채로부터 자유선택권을 향유
- ⑤ 안철수의 당 장악력은 단기간에 유지되고 중장기적으로 유지 불가능

20대 총선 국민의당 당선자 계파 분석



구분	이름	계파	노선	구분	이름	계파	노선
1	서울 안철수	안철수계	제3당 노선	20	전남 주승용	김한길계	야권통합 노선
2	서울 김성식	안철수계	제3당 노선	21	전남 손금주	안철수계	
3	광주 장병완	친안철수	탈당파	22	전남 정인화	안철수계	
4	광주 박주선	박주선계	탈당파	23	전남 황주홍	친안철수	탈당파
5	광주 송기석	안철수계		24	전남 윤영일	안철수계	
6	광주 천정배	천정배계	야권연대 노선	25	전남 박준영	박지원계	야권통합 노선
7	광주 김경진	친천정배	야권연대 노선	26	비례 신용현	안철수계	전문가 인재영입
8	광주 최경환	안철수계		27	비례 오세정	안철수계	전문가 인재영입
9	광주 김동철	손학규계	탈당파	28	비례 박주현	천정배계	
10	광주 권은희	친안철수	탈당파	29	비례 이상돈	안철수계	제3당 노선
11	전북 김광수	안철수계		30	비례 박선숙	안철수계	제3당 노선
12	전북 정동영	정동영계		31	비례 채이배	안철수계	
13	전북 김관영	김한길계	탈당파	32	비례 김수민	안철수계	
14	전북 조배숙	안철수계		33	비례 이태규	안철수계	제3당 노선
15	전북 유성엽	친안철수		34	비례 김삼화	안철수계	
16	전북 이용호	안철수계		35	비례 김중로	안철수계	
17	전북 김종회	안철수계		36	비례 장정숙	안철수계	
18	전남 박지원	박지원계	야권통합 노선	37	비례 이동섭	안철수계	
19	전남 이용주	안철수계		38	비례 최도자	안철수계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국민의 당선자의 계파 분석

안철수계(19)	안철수(노원병), 김성식(관악갑), 송기석(광주 서갑), 김경진(광주북갑) 권은희(광주 광산을),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신용현(비례대표1번), 오세정(비례대표2번), 이상돈(비례대표 4번), 백선숙(비례대표 5번), 채이배(비례6), 김수민(비례7), 이태규(비례8번), 김삼화(비례9번), 김중로(비례10번), 김정숙(비례11번), 이동섭(비례12), 최도자(비례13번)
----------	---

호남파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정배계(3)-천정배(광주서울), 조배숙(전북 익산을), 박주현(비례3번), ■ 김한길계(4)-장병완 (광주 동남갑), 이용주(전남 여수갑), 주승용(전남 여수을), 김관영(전북 군산) ■ 박지원계(5)-박지원(전남 목포), 최경환(광주북을),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 박주선계(1) ■ 정동영계(2)-정동영(전북 전주병), 김종희(전북 김제·부안) ■ 기타(4) 김동철, 김광주, 유성엽, 이용호
----------	---

(2) 호남 세력과 국민의당 주도권 경쟁

- ① 야당 주도권에 익숙한 호남정치 엘리트의 주도권 욕망은 대단히 높음
- ② 일차적으로 6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 예상
- ③ 합당 논의를 통한 안철수의 무력화 시도 가능성 → ‘안철수 야권 분열주의자’ → ‘안철수 야권 대표성 의구심 확대’ → 안철수를 위한 호남의 권력재창출 불가론 확대 → 안철수 대중지지도 하락
- ④ 국민의당의 자민련화는 호남의 정치적 고립 → 호남인들의 정치적 고립에 대한 공포를 해소해 줄 정치적 압력 존재
- ⑤ 6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합집산한 세력 간의 대결 불가피 → 약한 내부 응집력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호남민심이반을 결과 → 안철수 리더십의 한계 표출 → 안철수 대권지지도의 하락

(3) 호남 유권자와 안철수와의 관계

- ① 호남유권자의 정치소외감 → 4.13 총선에서 안철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등장 →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분노의 창구역할 → 안철수의 호남 정체성은 대단히 빈약 →
- ② 안철수에 대한 호남 지지의 전제
 - ㉠ 안철수 카드로 정권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대선지지를 선두자리 유지
 - ㉡ 호남 주요 정치 엘리트들의 지지 확보
 - ㉢ 정치과정에서 리더십을 통해 호남 정치의 확장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 호남에 대한 정체성 및 이익의 옹호
- ③ ㉠㉡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특히 ㉢ 호남정치의 확장성을 국민의당 구도로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④ 안철수는 대선 후보자로서 호남 개혁세력으로부터 확실한 비토를 받고 있다
- ⑤ 호남 유권자들이 두려워하는 호남고립 때문에 더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높을 가능성.

(4) 안철수와 대권 레이스

- ① 더민주당의 비주류와 안철수(국민의당)와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
 - 합리적 정치 게임 룰의 평탄작업
- ② 안철수 합당의 전제
 - ㉠ 문재인 후보자 사퇴 선언
 - ㉡ 더민주당 비주류의 당권장악
 - ㉢ 더민주당 비주류와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 높음
 - ㉣ 국민의당 호남정파의 안철수 지지 등
- ③ 위의 합당의 전제들이 성사되는 것이 현실성이 낮음 (특히 ㉠ 문재인 후보자 사퇴 선언)
- ④ 호남고립 해체를 위한 정치적 압력 → 안철수는 지루한 합당논의과정 → 호남에서 안철수 지지도의 추락 → 전국지지도의 추락
- ⑤ 안철수가 우선적으로 합당 이니셔티브를 가질 가능성
 - ㉠ 제3의 노선에 대한 안철수 정체성이 높아서 정치적으로 부담 → 언론의 정치적 공격 → 지지자의 이탈
 - ㉡ 더민주당+국민의당을 합산할 경우에, 안철수는 상대적으로 소수파로 전략 → 경선 레이스에서 후보자로 선택될 가능성 현저히 낮음
 - ㉢ 국민의당 해계모니 전략유지를 통한 대선 레이스 참여가 유리
- ⑥ 대선 레이스의 최종 후반에 합종연횡, 흔들림 없는 대선 레이스의 완주

V. 정국상황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1. 낮은 정당구조화 수준과 공직자 선출과정: ‘정당과 시민사회의 따로국밥’

① 한국 사회의 낮은 정당구조화 (정당-시민사회의 연결구조)의 원인

㉠

㉡

㉢

② 정당의 낮은 정당구조화가 공직자 선출과정의 우스꽝스러운 실패(fiasco)를 낳는다.

③

④

⑤

2. 정당과 시민사회

① 시민사회의 2분법적 사고

㉠

㉡

㉢ 3. 국회 입법 이슈와 시민사회

4. 대선 레이스와 시민사회: 대선 레이스 끼워들기

(1) 야권연대 문제는 정치엘리트들의 아젠다인가? 아니면 시민사회의 아젠다이기도 한가? (5)

